

與 “탈북어민 북한제물로 바쳐” 文 책임론 부각 총력전

“김정은 정상회담 쇼…국민 제물로 바쳐”
“관련자 책임져야…국정조사·특검 가능”
“文, 지정기록물 공개 요청해야” 입장 요구

국민의힘이 통일부의 탈북어민 강제 복송 영상이 공개된 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시 제대로 된 조사나 절차 없이 탈북어민을 송환한 것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쇼”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탈북어민 강제 복송 영상이 공개됐다.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라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이들이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작성한 보호 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범죄의 증거로 내세웠던 선박의 헬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이들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

로 보고 범죄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나 절차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복송 영상을 확보해 강제 복송 영상과 비교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보안 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강제 복송) 영상으로 반인권 독재국가에 있을 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불법행위가 인권보호사라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대체 북한의 김정은과 어떤 거래를 했길래 만행을 서슴지 않았는지 (문재인 정권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부끄럽게 만든 국기문란 사건의 반인륜적 불법행위가 여실히 드러나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된 자들은 검찰 수사에



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제 복송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관과 탈북 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인권 의식의 열악함을 여실히 알게 해준 사건”이라며 “특히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를 무시하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했어야 할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조사는 감사든 수사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좋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최종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땀땀하다면 직접 나서서 이번 강제 복송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살인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청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도 “(북한에 강제 복송된) 두 명의 귀순 어민들이 곧바로 공개 처형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더라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송환하는 것은 유엔 난민협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계속되는 침묵은 결국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제물로 바친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尹 “대우조선 ‘불법 파업’ 장기화…국민도 용납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에 미치는 피해 막대해”

청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2층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도 노조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냐고 묻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어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지되거나 용인 대신 안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이슬기자

尹,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60% 넘어’

尹, 지지율 하락에 “원인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를 넘어선 데에 “열심히 노력할 뿐”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60%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다.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조”라고 답했다.

이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지지율의 등락과 관련된 질문에 ‘일회 일비하지 않겠다’고 일관적으로 밝혔던 데에 비하면 위기감이 느껴지는 답변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16일)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는 33.4%, 부정 평가(잘못하는 편, 매우 잘못함)는 66.3%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6.3%포인트 오르며 격차는 29.9%포인트로 벌어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같은 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32%, 부정 평가가 63.7%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평가 중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53.5%에 달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악화된 여론을 보여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